과학벨트 통합배치 확정…광주유치 비상

非수도권 60~80개 시군 후보지

중이온가속기·기초硏 분산 않기로
공모 없이 입지委 평가 후보지 선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가 1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한 곳에 두는 '통합배치' 원칙을 확정했다. 과학벨트위는 그러나 광주시가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부문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적격-부적격'으로만 판단키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상주 과학벨트위 부위원장(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은 이날 2차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과학벨트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은 중이온가속기로 하고,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원과 통합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 50개는 연구원 내부는 물론 외부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설치·운영하되, 구체적인 설립 형태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에 설치되는 연구단 수를 명확히 정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이 부분이 논란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확정된 과학벨트 입지선정 계획안에 따르면 과열경쟁을 막는 차원에서 입지선정 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과학벨트위가 전적으로 각 지역의 입지요건을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평가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으로서 165만㎡(50만평) 이상의 개발 가능 부지를 확보한 전국 시·군이 모두 해당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군은 60~80개 정도로 추정된다. 과학벨트위 분과위인 입지평가위원회가 이들 부지의 점수를 매겨 5개 후보지로 압축하고, 과학벨트위는 이 가운데 다시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심사평가 항목은 과학벨트법상 입지 요건 가운데 '부지 확보 용이성'을 제외한 4가지 요건별로 3~5가지씩 두기로 했다. '부지 확보 용이성' 평가 항목은 '165만㎡ 이상 비수도권 시·군' 조건으로 대치하기로 했다.

또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았던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의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세부 항목별로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한다.

'연구기반 구축·집적도' 부문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정도 ▲연구인력 확보 정도 ▲연구 시설·장비 확보 정도 ▲연구성과의 양적·질적 우수성이 심사항목에 포함됐고, '산업기반 구축·집적도' 부문은 ▲산업 전반 발전 정도 ▲지식기반산업 발전 정도 ▲산업 생산성 ▲기업의 활력 등을 따지게 된다.

'우수 정주환경 조성 정도'에서는 ▲교육 ▲의료 ▲문화 ▲소비 환경을 판단하고,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문은 ▲국제공항 접근성 ▲대도시 접근성 ▲전국 시·군간 시간거리 등의 항목을 통해 평가한다.

세부 심사항목별 가중치는 연구·산업·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20~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설정된다. 이 전문가 그룹은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입지평가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거점지구와 긴밀히 연계할 '기능지구' 입지는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도에 대한 정량평가, 거점지구와의 기능적 연계성 및 접근성을 따지는 정성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달 말~5월 중 평가를 거쳐 5월 말 또는 6월 초 입지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2차회의에서 민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주 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아파트 1만3000여가구 분양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매입기관 확대

국토부 혁신도시 활성화 회의…나주 우정사업정보센터 이달 착공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부동산 매입 기관을 종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여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전국 10개 혁신도시 부단체장 및 추진단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집중 점검했다.

◇종전부동산 매입기관 확대=국토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이전의 재원인 종전 부동산(현재 사용중인 공공기관 청사 등)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 LH로 한정해 놓은 종전 부동산 매입 기관을 캠코와 농어촌공사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LH의 자금난으로 자금이 선투입되는 종전 부동산 매입이 어렵게 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혁신도시 청사 건립 등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종전부동산 매입 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추진중이며 현재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올해 아파트 1만3000여가구 분양=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100개 이전 공공기관(임차청사 15개 제외)중 한국전력,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78개 기관이 현재 부지를 매입했고, 이중 86개 기관이 청사 설계에 착수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15개 이전 기관 중 11개 기관이 부지 매입을 마무리했고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이달중 착공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아파트 분양도 본격화된다.

부산, 대구, 강원, 울산, 경남 등 10개 시·도의 혁신도시에서 총 1만3528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광주·전남에서도 민간 건설사인 부영이 29만941㎡(4필지)를 사들여 아파트 건립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별로 반드시 초등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10개 혁신도시에서 20개 학교의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앞으로 특목고, 자율학교 등 우수학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지자체, 이전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제시=광주·전남을 비롯, 자치단체들은 이날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공공기관 이전 연착륙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경우 ▲영어마을 조성 ▲장학재단 설립 ▲공립어린이집 건립 ▲경전철 건설 검토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출이자 현금보조 등을 내걸었다.

나도팔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은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조 들여 4대강 지류사업도 추진

1단계 2015년까지 하천 5500km 정비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올해로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약 20조원(추정치)을 투입해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4대강 지류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지류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청와대에 보고한 뒤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단계로 2015년까지 전국의 국가하천 3000km와 지방하천 2만7000km 가운데 1단계로 5500km의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4대강 사업이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본류를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면 지류·지천 사업은 지방하천과 소하천 생태계를 살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정호 환경부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 추진과제를 ▲수질 오염 예방 ▲수생태계 복원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 하천 정비 등이라고 밝혔다.

지역 주민이 맑고 깨끗한 하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구상이다.

소하천은 경작지나 주거지역, 위락시설 등 주변지역 토지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미처리 오수가 유입돼 수질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지역의 경우는 하천의 주요 오염원인 빗물처리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은 핵심 오염원인 가축분뇨 등에 대한 처리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지류에서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별 특성에 따라 정비하고, 도시 하천의 건천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원 확보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하천을 휴식이나 문화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지역별 특색과 고유문화를 접목해 정비하면서 하천 내 오염원을 철거하는 작업도 시행한다.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거나 나무 가꾸기 등이 주된 사업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기본 구상은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추진과정에서 사업 대상과 내용을 둘러싼 잡음도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기본적인 예산 확보는 물론 사업 시행부처 간이나 중앙-지방정부 간 이견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현대건설 'U대회 선수촌 시공' 이사회 통과

9월께 철거 시작, 내년 4월 선수촌 건립 착공

현대건설이 광주화정주공아파트를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키로 최종 결정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한다는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현대건설은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화정주공재건축조합측에 재건축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광주U대회 선수촌 건립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대건설이 제출한 재건축제안서가 오는 30일께 조합측의 '시공사 선정 총회'를 통해 확정되고 6월말께 서구청의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면, 조합 측은 관리처분계획(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평가하고 아파트의 분양가 및 토지와 건물의 지분율을 결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마지막 조합원총회를 거치게 된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9월께 철거가 시작되며 내년 4월 착공에 이어 2015년 4월엔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7월로 예정된 광주U대회가 끝나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거쳐 6개월 후부터는 정식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분양은 내년 5월께로 예정되어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분양분 2867세대와 일반분양분 860세대 등 총 3727세대로 이뤄진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